



☞ 정책동향 ...

KOVA

벤처기업 M&A 절차 대폭 간소화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산업자원부 윤진식 장관 주재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열고 '벤처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벤처기업간 합병 절차를 줄이고 주식교환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스닥 기업과 미공개 기업이 주식 수 5% 이내의 소규모로 합병할 때 미공개 기업의 등록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벤처기업이 소규모 영업을 양도할 때 주주총회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지나친 주식매수청구로 벤처기업간 합병이 무산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준을 조정하고 청구 시기를 주총 이전으로 제한한다. 주식교환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늘리기 위해 주식 현물출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1000억원 규모의 M&A펀드를 신설하고 M&A중개기관에 중개비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올해 중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2004년부터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중기청, 6兆규모 중소기업정책자금 통합

정부는 13개 부처에서 운영돼온 총6조원 규모의 각종 중소기업정책자금을 통합한다. 또 중기정책을 상시 평가해 효과가 없는 정책을 즉시 폐기하는 '일몰제(日沒制)'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이같은 정책자금 통합함과 중기정책 일몰제를 골자로 한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정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정책자금을 통합 ▲시설 ▲창업 ▲수출 등 3개 자금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M&A의 양도소득세를 경감해 주고 인수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벤처캐피털이 M&A를 통해 기업을 회생시키려 할 경우, 일시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상시 평가시스템을 적용한다.

이 평가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시책을 즉시 폐기하는 일몰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시책을 이달부터 올 11월말까지 일제히 점검한다. 또 중기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 향토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유망 향토기업에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고 정부차원의 마케팅 지원도 병행해 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을 ▲혁신형 ▲일반형 ▲생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차별적인 지원책을 펼 계획이다.

지방대학과 지방중소기업의 산학협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대학 안에 '중소기업협력단'을 구성토록 하고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도 강화한다.

신청은 7월12일까지 관련사업 홈페이지(<http://standard.smba.g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 산업동향 ...

KOVA

투명성 잦대로 '우열반' 나눈다... 코스닥개선 공청회

코스닥시장의 벤처 및 일반기업 구분을 없애고 지배구조 우수기업

과 일반기업의 두 그룹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코스닥시장 진입 기준을 일반기업과 성장형기업으로 분류, 각각의 등록요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증권연구원은 지난 25일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이 공동 개최한 '코스닥시장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연구원의 개선안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의 옥석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등록기업을 지배구조와 투명성이 뛰어난 'K-Class'와 일반기업인 'S-Class'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코스닥 진입제도 개선을 위해 등록 요건을 일반기업과 성장형기업으로 나누고 성장형기업은 현행 벤처 지정 및 등록요건을 강화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단기성장형기업과 생명공학 항공우주산업 등 투자회수 기간이 긴 장기성장형 기업 등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공청회 논의를 토대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 IT 기술유출 '원천봉쇄' 위해 보안매뉴얼 마련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IT관련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유출 방지매뉴얼'을 만들어 내년 중 중소·벤처기업에 보급하기로 했다.

정통부 진대제 장관과 무역협회 김재철 회장은 지난 26일 제3차 민관합동 IT산업해외진출 추진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기술중 IT분야가 84%에 이른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매뉴얼에는 PC 등 기기보안, 사무실을 비롯한 물리적 시설보안, 직원이직시 대처요령(보안서약 또는 처벌근거 마련) 등을 담아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기술유출에 따른 현행 처벌규정이 미흡하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영업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업계동향 ...



<IT> PICCA, 한국IT홍보제품 해외홍보지원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원장 조성갑)와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PICCA·회장 고시연)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을 선정, 해외 IT분야 전문 뉴미디어에 기술 및 제품 홍보기사를 게재하고 관련기사를 해외홍보 DB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대외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해 해외진

출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진출 유망제품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IT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참가 비용은 무료다.

참가 희망업체는 오는 7월5일까지 ICA홈페이지(www.icakorea.or.kr)나 PICCA 홈페이지(www.picc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NT> 마이크로·나노 가공기술 인프라 구축

산업자원부(장관 윤진식)는 초미세 부품 개발 및 나노가공기술 보급 촉진을 위해 초미세 부품 및 장비 제작 관련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을 상호연계하는 '마이크로 나노 점·선 가공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학·연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미세가공기술 및 장비의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새로운 가공기술을 확산·보급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첨단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기술대와 연세대가 공동추진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국비 42억원과 민간자본 12억원 등 총 5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 기술동향 ...



신기술융합프로젝트 유치경쟁 치열

NIT(NT+IT)·BIT(BT+IT)·NBT(NT+BT) 등 첨단 융합기술이 미래성장산업의 새로운 엔진으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신기술 융합개발 프로젝트를 잡기 위한 산·학·연간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관련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장관 박호근)가 올해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3 신기술융합사업 프로젝트'를 주관할 5개 사업단 신청을 최근 마감한 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산업체 등 총 16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평균 3.1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 신기술융합사업은 ▲나노-바이오 측정기술(NBT) ▲나노광정보 저장기술(NIT) ▲나노 정보소재 합성기술(NIT) ▲유용 바이오소재 정보화 및 설계기술(BIT) ▲차세대 시큐리티기술(SI) 등 5개 과제의 사업단을 선정하며 사업단별 15억~45억원씩 총 102억5500만원이 배정된 상태다.

과기부는 7~8일째 전문가·전문기관 평가를 거쳐 '국책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일째 최종 5개 사업단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8월 중 사업단과 협약을 맺고 9월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